



[산업] 한국지엠 “혁신 전환 계획 이행 노조도 약속 지켜야” 06



Life

[패션] 패션업계 ‘세컨드 브랜드’로 밀레니얼 공략 L4



### 침출수 흐르고 유해동물 출몰...

#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 농산물 폐기장 관리 ‘업무 폐기’

## 감사위원회, 환경관리 소홀 적발 차폐막 설치·폐기방법 개선 필요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가 농산물 폐기처리장의 환경관리를 소홀히 해온 사실이 감사에서 드러났다.

4일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이하 공사)는 도매시장 정돈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을 저해한 법인, 시장 도매인 등에 대해 시설물 사용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지난해 강서도매시장의 농산물 쓰레기처리장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적발됐다.

시 감사위가 2018년 9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서울시 먹거리 안전대책 특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강서도매시장 농산물 쓰레기처리장에서 외부로 반출

되지 못한 농산물 쓰레기가 보관용기가 아닌 작업장 바닥에 쌓여 침출수(쓰레기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가 흐르고 쥐와 비둘기 등이 처리장 내에서 섭식활동을 하고 있었다.

현재 공사는 시장상인협의회와 계약을 맺은 A업체에 쓰레기처리장을 사용·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0조에 의하면 농수산물식품공사는 보건위생상 또는 도매시장의 청결한 환경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을 저해한 시설 이용자에 대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시 감사위는 “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는 쓰레기처리장 사용자에게 아무런 환경 및 위생 등에 관한 지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며 “강서시장 농산물 쓰레기처리장의 환경 위해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

고 반출되지 못한 쓰레기는 압출박스에 적치하도록 하고 쥐나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 방제시스템(트랩, 차폐막)을 갖추라”고 통보했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 차폐막을 설치한 상태”라며 “내년까지 쓰레기처리장에 차폐용 전동식 셔터를 설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식품정책과는 시중 유통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산물을 제대로 폐기처분하지 않다가 이번 감사에 걸렸다.

시 식품정책과는 식품위생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서울 도매시장과 유통점(대형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농산물 시료를 수거해 식품 안정성 검사를 실시한 후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압류해 버리고 있다.

시가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6월까지 폐기처분 한 농수산물물은 총 66.23t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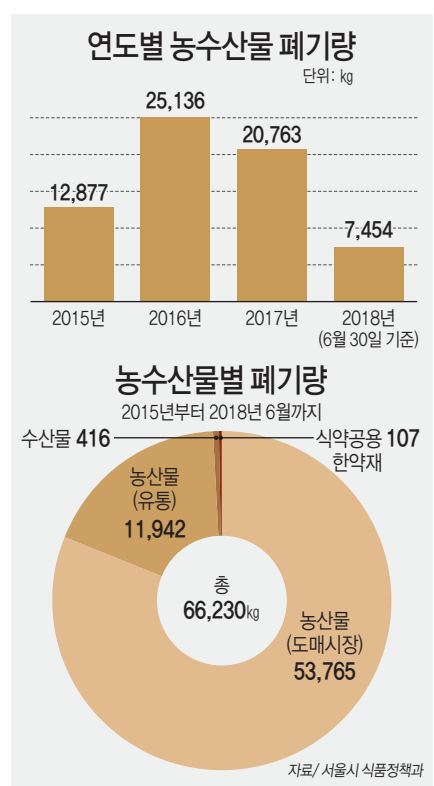
다. 도매시장 농산물이 5만3765kg로 가장 많았고 유통점 농산물 1만1942kg, 수산물 416kg, 식약공용 한약재 107kg 순이었다.

시 감사위가 가락·강서 도매시장 내 폐기처분 현장을 확인한 결과 운송용 차량이나 쓰레기 처리차량을 농산물 위로 몇 회 운행시키는 방법으로 폐기하고 있었다.

시 감사위는 “이러한 폐기방법은 건고추 등 일부 농산물이 완전히 파쇄되지 않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 식품정책과는 “폐기 상태가 미흡한 농산물의 완전 폐기를 위해 농산물을 분쇄해 버리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며 “폐기물처리업체와 장소 사용 협의 등이 필요해 2020년부터 분쇄기를 이용해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가락시장 현대화 탄력... 적정성 재검토 통과

### 기재부, 규모·사업비 ‘적정’ 결론 2027년 완공 목표로 사업 추진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시농수산물식품공사는 기획재정부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규모와 사업비를 재검토한 결과 적정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4일 밝혔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도매권역 1공구인 채소2동 중간설계 결과사업비가 393억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재부의 피로 한국개발연구원(KDI)가 수행했다. 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1조196억원으로 기존 7493억원에서 36.1% 늘었다.

공사는 “거래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복층구조 건축, 신선 유통 거리를 위한 정온시설 설치, 관계 법령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준수 등에 따라 사업비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건물을 복층화하고 하절기에



가락시장.

/서울시

는 26~28도, 동절기에는 10~15도 이상으로 건물 내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온 설비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저온유통시설을 확충해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은 총 54만3451㎡ 부지에 연면적 51만3159㎡의 규모로 가락물권역과 도매권을 분리해 단계별로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가락물권역은 2016년 6월 완공했고

도매권은 2027년 완공을 목표로 4개 공구로 나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사는 연말까지 채소2동의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건축공사를 발주할 방침이다.

공사는 “가락시장 현대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통인을 포함한 출하자, 구매자 등 모든 시장 이용자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 서울시, 노인들에 가짜건강식품 판매한 일당 검거

### 중국산 발기부전제 섞어 오자한 제조

60~80대 노인들에게 중국산 발기부전치료를 섞은 가짜 건강식품을 판매해온 일당이 달미를 잡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공급한 혐의로 2명을 구속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한 29명을 불구속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시 민사단에 따르면 A(72)씨와 B

(61)씨는 저가의 한약재에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을 섞어 성기능 강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오자한과 옥타코사놀플러스 가짜 제품 92억 원어치를 제조·공급했다.

특히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의 변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병용금지 의약품’에 해당한다.

/김현정 기자

## 경기도 민자도로 3곳 추석 연휴 무료통행

일산대교·제3경인·서수원의왕도로 오는 12일~14일까지 사흘간 면제

올해 추석 연휴기간에도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경기도는 추석을 맞아 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 등 경기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을 대상으로 무료통행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무료로 운영되는 고속도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이용자 편의제공을 위한 대책으로서 도에서는 2017년도 추석부터 통행료 면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

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이번 추석 연휴 무료통행이 시행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도로로 전 구간 이용 시 2,300원이다. 무료 통행 적용 기간은 오는 2019년 9월 12일 오전 0시부터 9월 14일 자정까지 총 72시간이다.

도는 이 기간 동안 일산대교 21만대, 제3경인 51만대, 서수원~의왕 40만대 등 약 112만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이 받게 될 혜택을 금액으로 환산 시 총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경기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

### 지원사업 규모 10배 이상 확대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을 75억원에서 757억원 규모로 10배 이상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0여개소보다 많은 800여개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20% 수준이었던 자부담 비율도 10%로 축소돼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적은 비용으로 노후한 대기배출시설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

도가 전국 최초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지설 설치 지원사업’은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업비를 지원, ▲노후시설 설치 및 교체 ▲악취(VOCs) 방지지설 설치 ▲백연방지시



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까지는 최대 80%까지 지원돼 자부담 비율이 20% 수준이었으나 올해부터 90%까지 지원 비율이 확대, 사업자 선정된 이후 10%만 부담하면 노후 시설을 교체하거나 방지지설을 새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경기=김승열 기자